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 · 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2015. 4. 21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사회적 ·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과연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추산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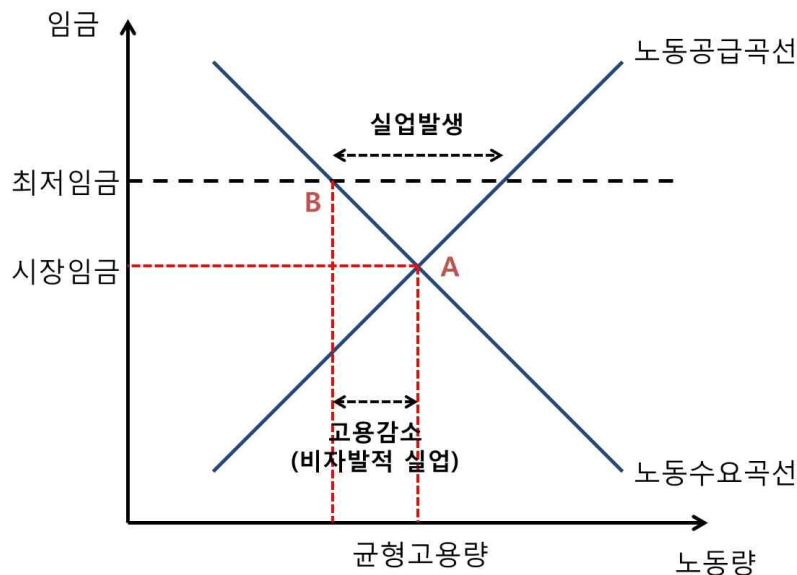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대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생계유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영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원인?

▣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

- 경영계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혹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임. 또한 노동수요 이상으로 노동이 공급됨으로써 실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림 1.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실업 발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윤 몫이 줄어들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음
- 경제학의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¹⁾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무수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가격수용자로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달성함
-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됨.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revenue)을 얻으며,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이윤(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 가격수용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쟁시장이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이 아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1)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노동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of labor)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를 나타냄. 일반적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에 생산물 한 단위가 가지는 시장가치(가격)를 곱해 구함. 이때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노동단위 하나가 더 투입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생산물의 양을 나타냄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경제학 내 이견

- 하지만 이윤 수준이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일치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임금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의 역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이윤 수준이 낮은 일자리들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의 역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Neumark 역시 마찬가지임
- 그러나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CEPR)의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는 2013년의 보고서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했을 때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²⁾
- 현재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경쟁시장이론을 따를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의 거래 단위가 노동시간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임
- 고용인이 많지 않은 자영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노동자 2명을 30시간 식 총 60시간 고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노동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임
-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을 줄이기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

▣ 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확대

-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시켜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ILO 등에서 내세우고 있는 임금주도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용자

2) Schmitt, J.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PR.



와 노동자의 몫 중 상대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임금을 상승시켜 투자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음

-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작다는 점을 들어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사용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임금주도 성장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더욱 큰 소비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소비의 확대는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런 소비 확대는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고용 인원 없는 독립영세자영업자³⁾들의 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물론 임금주도 성장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임금주도가 아닌 이윤주도 성장도 가능함. 이윤주도 성장은 사용자의 이윤을 확대함시킴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그것이 다시 고용과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것임
- 하지만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윤 확대가 과연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또한 Onaran와 Galanis의 연구⁴⁾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주도 성장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완화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임
- 가계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가계 소득 불평등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

3) 2015년 3월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규모는 397만 6천 명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7천 명임. 전체 자영업자 559만 3천 명의 71.1%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Vosko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이들 독립영세자영업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에 포함시키기도 함

4) Onaran, O. and Galanis, G. (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oor)를 감소시켜 빈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여성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정책으로서의 중요성도 가짐
-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이는 여성 빈곤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임. 현재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들이 활용되는 구조는 매우 불분명함
- 『최저임금법』 제1장 제1조는 최저임금제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986년 제정된 이 법률에 명시된 결정기준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표일 수 없음
- 최저임금제가 꾀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은 **최저생활수준**(minimum standards of living)을 충족해야 함. 최저생활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임금으로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지 않음
- **최저생활수준**은 사회적 빈곤수준이 아님.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 적정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 이 글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MIT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임금가구의 생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응용 설계한 모형(Basic Needs Budget)⁵⁾에 기반해 적정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 추산하고 있음
- 최저생활비용 = 식료품비 + 주거비 + 보건의료비 + 양육비 + 교통비 + 조세 + 기타
- 최저생활비용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 지출 항목별 중위수를 추출하여 합산함
- 이 자료에서 가계 지출의 대분류는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②주류 및 담배 ③의류 및 신발 ④주거 및 수도광열 ⑤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문화 ⑩교육 ⑪음식·숙박 ⑫기타 상품 및 서비스 ⑬비소비 지출” 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분류로 구성함

최저생활비용 항목	가계 지출 구성 내용
식료품비	①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⑩의 식사비
주거비	④주거 및 수도광열 - ④의 실제주거비 + 월세평가액
보건의료비	⑥보건 + ③의 사회보장의 건강보험료
양육비	⑩교육 + ⑫의 사회복지
교통비	⑦교통
조세	⑬의 경상조세 + ⑬의 연금 + ⑬의 사회보장의 기타사회보험료
기타	식료품비 × 2

주1: 기타는 의복, 통신, 가사용품, 레저 등을 포괄하는데 식료품비 대비 비율의 전체 가구 평균이 약 3분의 2임. 미국 모형은 식료품비+주거비 대비 3분의 1을 쓰는데, 한국은 주거비가 커서 식료품비만으로 계산함.

주2: 주거비는 결국 ④의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에 월세평가액을 더한 것임. ⑫의 사회복지지는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로 구성됨.

- 가구유형은 다섯 가지 형태를 고려함. 성인1(핵심연령대인 만25-54세)/ 성인1-자녀1(자녀 연령은 생산가능 연령 미만인 만14세 이하)/ 성인1-자녀2(두 자녀 모두 만14세 이하)/ 성인2-자녀1(자녀 연령 만14세 이하)/ 성인2-자녀2(두 자녀 모두 만 14세 이하)

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livingwage.mit.edu/pages/about>)를 참조



- 성인이 모두 취업자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출함. 특히 외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비시장 노동으로 대체하는 지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 또한 시간급 환산시 부부가 모두 전일제 맞벌이인 경우를 가정하므로 맞벌이 가구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산출결과

- 위 분석방법을 통한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인1	성인1-자녀1	성인1-자녀2	성인2-자녀1	성인2-자녀2
식료품비	348,113	532,817	528,674	697,145	738,064
주거비	541,038	821,832	1,049,154	990,884	1,126,003
보건의료비	101,259	163,231	162,700	245,014	266,706
양육비	0	254,521	400,005	176,502	452,476
교통비	116,836	157,901	133,470	265,924	266,666
조세	102,675	84,599	111,646	274,156	301,045
기타	232,075	355,211	352,449	464,763	492,043
최저생활비용	1,441,996	2,370,112	2,738,098	3,114,388	3,643,003
시간급 환산 (주 40시간 전 일제 기준)	6,914	11,364	13,128	7,466	8,733

- 환산한 시간급의 평균은 2014년에 9,521원임
-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은 7,466-13,128원임
-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기혼여성인구의 45% 이상은 자녀수가 2명, 1명인 비중은 약18%, 3명은 17%임
- 그러므로 사회적 재생산을 고려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최소 8,733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이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통한 생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금주도 성장이론의 “구매력 확대에 기반한 소비 증대 ⇨ 투자 증대 ⇨ 경제성장” 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2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앤,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